

힘겹게 내는 SOS 신호... 학교가 눈·귀 더 열어야

방관이 부르는 비극 학폭

<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은 또래 학생들 10여명에게 수시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지난해 9월 이 학교 대상자(702명)의 82.1%인 576명이 참여한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를 제보한 학생은 없었다.

10년 전인 2011년 12월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등진 대구 권승민군 사건 이후 나온 전문상담사 배치, 폭력실태 전수조사, 매학기 1차례 이상 교사·학생 1대 1 면담 등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곁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현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생들이 힘겹게 내는 SOS 신호를 잡

형식적인 실태조사 도움 안돼 피해 학생들 입 열 수 있도록 지속·효과적인 예방교육 절실 멘토 담당 교사들도 많아져야

아내는 데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안타까운 학폭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학교야,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비영리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개입을 꺼리는 현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이 지난해 말 전국 학생(초등 2~고교 2학년) 6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전국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8%에 달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에도 가

해 학생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1.5%나 됐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는데, 가해자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보니 피해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10명 이상이 지목됐고 교실 안팎에서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학교측은 전혀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 상담 요청도, 상담을 통한 피해 호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측은 피해학생의 고통을 모른 채 고교 '교육관계가 좋은 학생'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생활기록부 기초조사를 통해 가정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가족 내부 일을 학교에서 묻는 자체로 낙인 효과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밀접한 면담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허점이 적지 않다. 광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 설명이다. 학생이 직접 상담이나 피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학교와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찰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 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느 시점에서 학교폭력이 우리의 학교와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사의 부재 때문"이라며 "평소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멘토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교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야, 아이들을 살려라=지난 3월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심각한 신체폭력이 아닐지라도 학교폭력의 조짐이 있거나 발생을 목격할 경우 보호자나 해당 학교에 통보하거나 교육청에 보고나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사 개입은 한정적이다. 학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은폐 우려가 지 나온다.

올해부터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로

해결 하고, 이외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해결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학교폭력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 넘길 우려도 여전하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발견된 폭력을 보고하거나, 학생의 진술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도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서 멈춰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의 구체적인 역할이 제도에서 빠져있다 보니 피해학생들이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1년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권승민 군의 어머니 임지영씨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교사는 진술서만 쓰면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인식 가능 하다"고 말했다.

<글>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휴대전화·태블릿 분석 완료... 학폭 수사 속도

경찰이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학교폭력으로 고등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의 유족이 경찰에 제출한 A군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쳤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와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숨진 A군이 다녔던 B고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했다

고 진술한 또래 학생들과, 가해자로 특정된 학생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학생들의 학사일정으로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B고교가 이년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참고인은 물론 가해자로 특정된 11명의 학생들에 대한 1차 대면 조사를 이번 주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회적 약자 위한 '백신 나눔 캠페인' 14일 백운광장 일원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구청 공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 남구청 제공>

위드마크 적용 음주 적발했지만 무죄 왜?

법원 "술 양 추정할 뿐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 못해"

A(59)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46분께 장성군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상태로 SUV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및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진술을 토대로 '3시간 30분 동안 소주 1병(360ml)'을 나눠 마신 것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여기에 A씨 체중, 체내흡수율, 알코올 비중 등을 포함하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법)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5%로 계산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유리한 수치들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

윤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35%인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A씨 진술 등으로 마신 술의 양(소주 한 병)을 추정할 뿐 정확하지 않다고 봤다. 피고인이 실제로 소주 한 병을 마셨는지, 3시간 30분 동안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를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공복인 상태에서 오직 술만을 마시면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약 15분 내에 신속하게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A씨 수치는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피해자 고통 계속되는데... 성추행 변호사 능력 재판 안된다"

광주여성단체, 조속 판결 촉구

광주여성단체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있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법원의 '능력 재판'이 피해자를 고통 속에 가둬두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선 변호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

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과 관련, 3월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 변경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을 돌린 이후 수 차례 선고 일정을 바꿨다. 공개 재판이 아닌데다, 재판 일정을 연기한 사유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능력재판',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 연기가 납득할 사정인지, 다른 재판과의 형평에 맞는지도 알 수 없다.

여성단체연합은 이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로 안전

하게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판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하는 국선변호사의 위치에서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초도 섬 내 시세 9억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오피스텔 매매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8층, 계약 108㎡ 전용 67㎡
-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 매매 - 1억1000만원
-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 1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